취약계층 밥상에 담긴 고단함

박순애씨가 차린 저녁상.

고물가에 더 부실해진 '한 끼'

광주·전남 취약계층 저녁 밥상 보니

공과금 내면 남는 돈 10여만원
김치 등 세가지 반찬과 콩밥
아들 생일 케이크는 꿈도 못꿔
반찬 가짓수 안늘리고 버텨
지자체 나서 대책 마련 시급

정모씨가 차린 저녁상.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최근 식재료 가격이 폭등한 탓에 밥 한끼 제대로 먹기 힘든 실정이 된 것이다.

최근 광주일보 취재진이 만난 광주·전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반찬 가짓수를 줄여가며 배고픈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박순애(여·78·산수동)씨의 18일 저녁 밥상은 김치 등 세 가지 반찬과 콩밥뿐이었다.

박씨는 이웃에게 선물받은 묵은지와 시장에서 5000원 주고 떨이로 사 온 파김치, 1만원짜리 미역으로 담근 냉채 등 총 1만 5000원이 안 되는 밥상으로 한 달을 버틸 계획이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은 친구 집에 들러 고구마로 때우고, 아침 저녁에는 집에서 김치만 놓고 때우기도 한다.

박씨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8000원에 팔았는데 이젠 1만 1000원을 달라고 하고, 옛날엔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작은 포기김치를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사라졌다"며 "한 달 수급비를 모아봐야 30여만원인데, 전기·수도세 등 공과금을 내고나면 한 달 10여만원 남는다"고 푸념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201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감수진(여·37·나주시)씨는 지난 15일 큰아들의 여덟 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생일상에 케이크조차 올리지 못했다.

생일상은 호박잎 나물, 오므라이스, 계란볶음밥, 멸치볶음만으로 차렸다. 호박잎은 나주재활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이 나눠준 것이며, 계란·우유·콩 또한 나주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받아왔다.

감씨는 "고기는 너무 비싸 꿈도 못 꾸고, 아들이 좋아하는 우유를 많이 주고 싶어도 몇 달 전 한 병에 5000원이었는데 6700원으로 올랐다"며 "장을 보러가서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었다. 포도 한 상자는커녕 한 송이에 8000원, 샤인머스켓은 1만원을 넘길래 발길을 돌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숙희(여·66·지원동)씨는 남편(68)과 둘이 먹는 저녁상에 동탯국과 김치, 양배추, 풋고추, 장류만 올렸다.

최근 양배추 가격이 2000원에서 4000원대로, 동태 가격도 3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두 배씩 올라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는 것이다.

은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며 한 달 70여만원 급여 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인데, 생활이 빠듯해 당장 식비부터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씨는 "남편은 크게 다쳐서 일 못 하는데 의료급여만 받고 기초수급지원금도 못 받고 있다. 그나마 집은 LH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 월세가 안 나가 천만다행"이라며 "한 달 식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산해 본 적 없으나, 최대한 반찬 가짓수 안 늘리고 근근이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모(64·순천시)씨도 18일 저녁식사를 어묵볶음,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만으로 해결했다.

정씨는 "16년 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올해처럼 힘든 때는 처음"이라고 했다. 반찬거리를 싼 가격에 구하려고 장터, 로컬푸드, 식자재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 보기도 했으나 도무지 값싼 반찬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씨는 "3000원어치 나물거리를 장에서 사서 무쳐먹기를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 같은 양의 나물이 1만원에 달하자 나물조차 못 먹고 있다"며 "값이 비교적 싸다는 5일장 등 지역 장터에 들러도 고기나 생선 등은 한 달에 한 번 살까 말까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0~2%대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는 5.1%로 뛰었다. 올해 또한 8월 기준 3.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9만 5876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18년 7만 2757명에서 5년 새 31.7% 급증했다. 전남 또한 지난 2018년 8만 4819명이던 수급자 수가 올해 10만 6862명으로 25.9% 늘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상승,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고물가가 이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이다"며 "지자체와 복지단체가 나서 취약계층의 먹을거리를 챙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한양측 주장 수용 안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신청된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9일 주식회사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빛고을과 우빈산업은 20일 임시주총을 열어 롯데건설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급 공사 계약 승인건을 이사회에 위임할 예정이다.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체결 등에 대한 결정여부도 위임할 계획이다.

한양은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도 별도의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양은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할 경우 한양의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빛고을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 받을 예정이고, 세부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이 별도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케이앤지스틸이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이 출자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은 2020년 4월 광주시가 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해 독점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망한 회원 260명 선거인명부 포함 5·18부상자회 대의원 선거 무효 판결

사망한 회원 260명을 포함해 대의원수를 산정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의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5·18유공자인 A씨가 5·18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일자로 공고된 대의원 당선 결과는 무효가 됐다.

부상자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수는 지회별 등록된 회원수의 8%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상자회는 지난해 10월 대의원 선출공고를 하고 총 회원수를 2175명으로 확정, 대의원수를 174명으로 산출해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A씨는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어 회원들의 선거·피선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한 회원을 포함한 명부로 대의원수를 산출하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보훈부에 사실 관계확인을 거쳐 확인한 회원수는 2175명이었지만 이들 모두를 회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명단에서 사망한 회원수는 260명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선출할 대의원 수는 153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의원 선출 당시 부상자회가 보훈처(현재 보훈부)에 명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공시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회원수 확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용직 22명 임금 4000여만원 체불한 사업자 구속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4000여만원을 떼먹은 50대 사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전기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충청도 지역에서 전기 사업을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0분께 목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나오던 중 목포지청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목포지청은 피해 노동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